

미국은 지금

법원이 멈춰 세운 트럼프 관세 전차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US Strategy 김승혁 ocean93@kiwoom.com



Issue Brief

관세 정책 중단을 명령한 법원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트럼프가 4/2 부과한 관세에 대해 무효화 조치를 시행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통령 권한을 넘은 조치이고, 관세 정책의 근거 법안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또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헌법이 부여한 의회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 및 대외무역 규제 권한이 훼손되었다고 밝혔다. 3인 판사가 만장일치 판결을 내리며,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관세 철회를 위한 10일의 기간을 주었고, 10일 동안 징수된 관세는 이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 타겟이 된 관세정책과 무관한 관세정책

국제무역법원 판결은 IEEPA 법안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1)10% 보편관세, 2)멕시코·캐나다에 부과된 관세(현재 일부 유예), 3)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4)펜타닐 관세(20%) 등이 포함된다. 즉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 관세 Section 232(무역확장법 근거),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보복관세 Section 301(무역법 근거), 특정 품목에 대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조치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은 이번 법안과 무관하다. 트럼프 2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관세 정책들은 제동이 걸렸지만, 미국 행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조치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을 앞세운 민주당과 트럼프의 반발

트럼프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 12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중소기업 단체이다. 소송에 참여한 주지사들은 네바다 및 버몬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주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또한 이들 12개 주에서 선출된 상원의원 24명 가운데 2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즉, 이번 소송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본격적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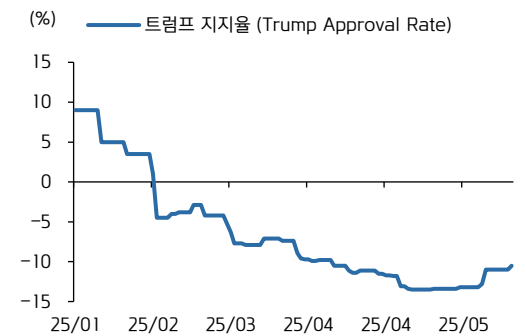
법원 결정 이후, 트럼프는 곧바로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했으며, 긴급 집행정지(Stay)를 신청했다. 1심 판결에 대한 즉각적 명령 이행을 항소 결과 전까지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여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 효력을 '임시로' 중단했다. 연방순회항소 법원은 국제무역과 특허 등 특정한 사건 유형에 대한 전국적 관할권을 갖는 2심 항소 법원이다. (2page 계속)

트럼프의 관세 정책 취소 명령을 내린 법원



자료: 언론보도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 지지율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만약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사법 체계상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재심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 결정이 최종 승자를 가릴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진행될 전투

2심 법원이 트럼프의 긴급 집행정지를 수용했지만, '임시로' 받아들였다. 전체 항소기간 동안 관세 정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시간만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과 트럼프에게 각각 6/5, 6/9 일 까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라 명령했다. 즉 양측 주장을 모두 받은 6/9 일 이후 본격적인 관세 정책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관세 정책이 항소심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냐 여부가 결정되는 실질적인 시점은 6/9 일 전후이다.

항소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신속 심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행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항소를 제기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특성상,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리를 요청할 경우 바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판사가 재판에 참여하여 심리를 다시 진행한다. 관세 정책과 같은 중대한 안건의 경우 모든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과정에서 몇 개월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소심 기간 동안 관세 정책이 유지되느냐, 중단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2심 판결 역시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2심에서 1심 판결을 기각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트럼프가 대법원까지 상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당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능성을 보인다. 2심이 진행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명의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8명의 판사를 민주당 대통령이 선출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자신을 선출한 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것을 감안할 때 민주당에서 선출된 판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2심 재판에서 국제무역법원이 내린 위헌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무시한다면?

6/9 일 이후 2심이 만약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무시한 채 관세 부과를 지속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 3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인 추방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송환을 강행했다. 또한 연방기관의 감사관 및 공무원 해임을 중단하고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며 항소심까지 시간을 끄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처럼 법원 명령을 무시하거나 집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역시 즉각적인 관세 부과 정지보다는 시간을 끄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행정부가 사법부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 모독죄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행정부 고위직이나 대통령이 관련된 법률로 직접 처벌받은 전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과감하게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다.

다른 전략을 펼 수도 있다.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는 중단하지만, Section 301 및 Section 232를 이용한 품목별 관세를 확장할 수 있다. 관세를 위한 포장지만 바뀔 뿐이다. 301과 232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민주당 집권기에도 진행된 사례가 있기에, 법원이 해당 조항까지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301 혹은 232와 같은 구체적 법률을 기초로 관세 부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6/9 일 이후에도 관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회적 관세 부과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약해질 트럼프의 관세 정책

앞서 언급한 행보(관세 우회 부과, 법원 명령 지연 적용)가 오랜 재판 기간 동안 지속되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필요한 것은 공화당 내부의 지지이다. 민주당에서 시작한 소송인 만큼 공화당 내부 결속이 있어야 법원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다. 다만, 최근 공화당 내부 트럼프의 지지층이 점차 약아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21%의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남용한다고 답한 사례가 있으며, 17%는 관세 정책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현재 상원 100석 의석은 민주당 45석, 공화당 53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의석 수는 6석 정도이다. 공화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지지가 아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지지 세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법원의 관세 정책 중단 판결로 인해 법적 명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이다.

법원이 금지한 기존 관세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세 법안을 도입하려는 시도 역시 현재로는 쉽지 않다.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다. 다만, 공화당은 53표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신규 관세 정책을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낮아지는 트럼프 지지율 역시 변수로 작용한다.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질 수 있지만, 해당 기초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물론 긴급 집행정지가 2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관세 정책 기초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민주당 선출 판사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2심 재판부에서 트럼프에게 긍정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현재로는 낮다. 이에 더해 법원의 명령을 행정부가 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트럼프 지지를 철회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관세 정책 강도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트럼프가 선보인 비합리적 수준의 관세 정책 부과 행보는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각 국가들과의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법원 명령이 오히려 트럼프를 급하게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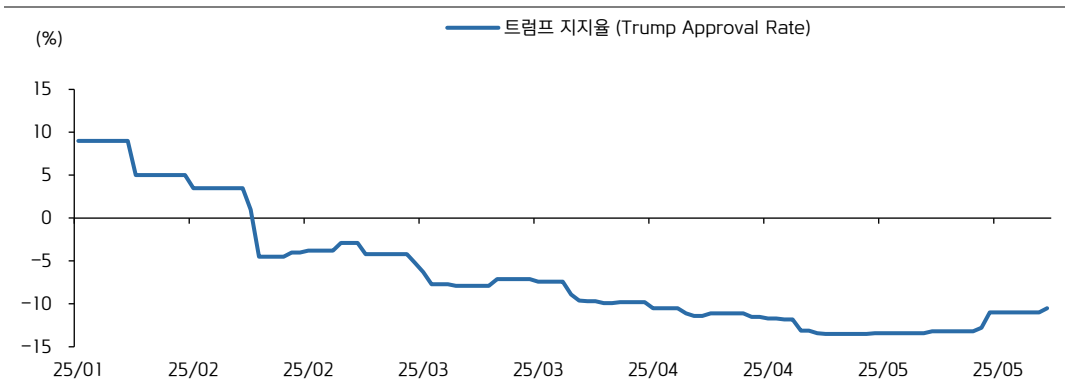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증시 상황을 예상해 볼 경우, 관세 중심 법원 vs 트럼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증시 횡보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국면이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관세 정책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국가 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시나리오 속에서 증시의 장기 성장 동력은 높아질 수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연내 증시 상단을 꾸준히 누르고 있던 만큼, 트럼프의 관세 추진력이 약해질 경우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는 IT와 커뮤니케이션이다. 민감도가 높아 빠른 회복성을 보일 수 있으며, 최근 1분기 실적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관세 관련 우려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증시가 빠르게 회복했을 때에도 IT 및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증시 반등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관세 정책 강도가 점차 약해질 것이라 관점을 통해 하반기 증시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

2심 연방순회항소법원 구성 판사 및 지명자

판사	출생	업무 기간	지명자	
Kimberly A. Moore	1968	2006-present	G.W. Bush	공화당
Pauline Newman[d][e]	1927	1984-present	Reagan	공화당
Alan David Lourie	1935	1990-present	G.H.W. Bush	공화당
Timothy B. Dyk	1937	2000-present	Clinton	민주당
Sharon Prost	1951	2001-present	G.W. Bush	공화당
Jimmie V. Reyna	1952	2011-present	Obama	민주당
Richard G. Taranto	1957	2013-present	Obama	민주당
Raymond T. Chen	1968	2013-present	Obama	민주당
Todd M. Hughes	1966	2013-present	Obama	민주당
Kara Farnandez Stoll	1968	2015-present	Obama	민주당
Tiffany P. Cunningham	1976	2021-present	Biden	민주당
Leonard P. Stark	1969	2022-present	Biden	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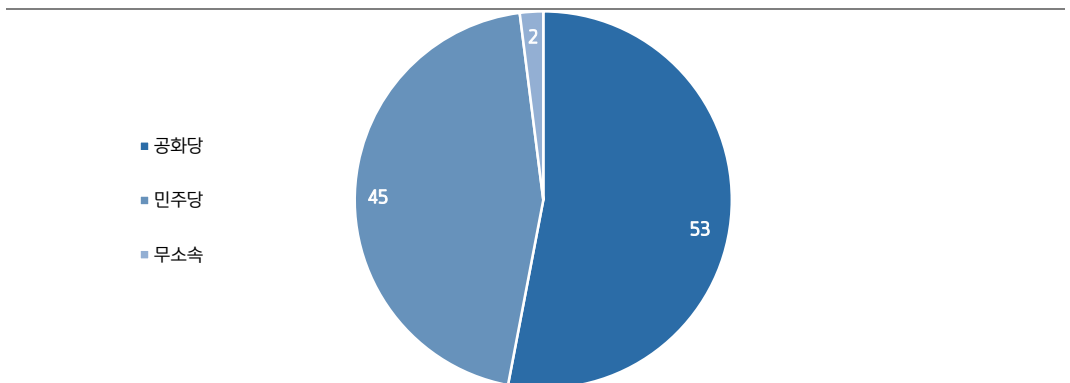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 지지율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상원 정당별 구성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재판 원고로 참여한 12 개 주와, 각 주에서 배출된 상원의원 소속 정당

주	상원의원 1	소속	상원의원 2	소속
Arizona	Mark Kelly	민주	Ruben Gallego	민주
Oregon	Jeff Merkley	민주	Ron Wyden	민주
Colorado	Michael Bennet	민주	John Hickenlooper	민주
Connecticut	Richard Blumenthal	민주	Chris Murphy	민주
Delaware	Tom Carper	민주	Chris Coons	민주
Illinois	Dick Durbin	민주	Tammy Duckworth	민주
Maine	Angus King	무소속	Susan Collins	공화
Minnesota	Amy Klobuchar	민주	Tina Smith	민주
Nevada	Catherine Cortez Masto	민주	Jacky Rosen	민주
New Mexico	Martin Heinrich	민주	Ben Ray Luján	민주
New York	Chuck Schumer	민주	Kirsten Gillibrand	민주
Vermont	Bernie Sanders	무소속	Peter Welch	민주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